

[청구인] ○○○○

[피청구인] ○구청장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」을 취소한다.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한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로 ○○(○○동) 소재 '○○석유'의 대표자로, 등유를 실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덤프트럭의 연료로 20○○. ○. ○○. (1차 위반, 1차 적발), 20○○. ○. ○○. (2차 위반, 2차 적발) 각 판매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○○본부(이하 '석유관리원'이라고 함) 단속에 적발되었다.

나.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으로부터, 1차 적발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○., 2차 적발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○.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을 받았다.

다.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등유를 실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덤프트럭의 연료로 다시 판매(3차 위반, 3차 적발)하였다.

라.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(이하 '석유사업법'이라고 함)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,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 6개월 처분에 앞서,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다.

마. 피청구인은 20〇〇. 〇. 〇. 석유관리원으로부터 3차 적발에 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을 받았다.

바. 피청구인은 20〇〇. 〇. 〇〇. 청구인의 1, 2, 3차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사업정지 6개월(20〇〇. 〇. 〇〇. ~ 20〇〇. 〇. 〇〇.)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 이라고 함)을 하였고, 청구인은 20〇〇. 〇. 〇〇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1년 정도 사업을 운영해 오던 시점에서 본의 아니게 1, 2차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실은 인정한다. 그러나 피청구인은 1차 4개월, 2차 3.5개월을 각 처분하였는데,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을 하였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령 해석상 하나의 처분으로 영업정지함이 타당하다.

나.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계절의 영향으로 유류 사용량과 거래처가 줄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잘못된 유혹에 빠진 것이므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.

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고,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감경할 필요가 있다.

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두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, 각각의 사업정지 기준은 3개월과 1개월에 해당하므로, 1회 위반 시 사업정지처분 기간은 각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4개월이다. 또한

청구인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기간 중 추가로 2회 적발(총 3회)되었으므로,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[별표1] 제1호 나목에 따라 추가 위반횟수마다 사업정지 기간을 2개월씩 가중하면 총 사업정지 기간은 8개월이나, 석유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. 따라서 ‘하나의 처분이 타당하다’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청구인은 최초 적발 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2회씩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, 위반 횟수,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경할 이유가 없다.

4. 이 건 처분의 위법 · 부당 여부

가. 관계법령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, 제39조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, 제43조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, 제16조 [별표 1]

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등유를 실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덤프트럭의 연료로 20〇〇. 〇. 〇〇. (1차 위반, 1차 적발), 20〇〇. 〇. 〇〇. (2차 위반, 2차 적발), 〇. 〇〇. (3차 위반, 3차 적발) 각 판매하였다.

2)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〇〇본부로부터, 1차 적발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, 2차 적발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, 3차 적발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.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을 받았다.

3)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.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.

4) 이 사건 처분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.

- 산정방식: ①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각 3회 위반, 제1항 제10호 각 3회 위반, ② (개별기준)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1회 위반시 [별표1] 2. 개별기준의 라.항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가운데 15)의 바)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, 같은 조 제1항 제10호 1회 위반시 [별표1] 2. 개별기준의 라.항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가운데 15)의 바)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, ③ (일반기준) [별표1] 1. 일반기준의 가.항에 따라, 위반행위가 3회이고,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이므로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되,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: 사업정지 4개월, ④ (일반기준) [별표1] 1. 일반기준의 나.항에 따라,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: 위반횟수 2회, 행정처분기준 4개월, 2분의 1씩 더하면 2개월씩 총 사업정지 8개월, 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사업정지 6개월을 산정

5)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.

6)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,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, 근거법령, 행정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처분이유: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3회 판매함
- 근거법령: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,
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
- 행정처분내용: 사업정지 6개월(사업정지기간 2000. 0. 00. ~ 2000. 0. 00.)

7) 청구인은 2000. 0. 00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,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2000. 00. 00. 인용되었다.

다. 판 단

1)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,

가)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는 등유, 부생연료유, 바이오디젤, 바이오에탄올, 용제, 윤활유, 윤활기유,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·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,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나) 또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등유, 부생연료유, 바이오디젤, 바이오에탄올, 용제, 윤활유, 윤활기유,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·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3개월로 하고,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. 또한,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

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,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,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.

2)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를 살펴보면,

가) 처분의 위법·부당성에 관하여

각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, 시료채취 확인서, 행위의 금지 위반 확인서, 단속결과 관련 사진, 의견제출서를 보면, 청구인이 1, 2, 3차 각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. 또한, 20○○. ○. ○○.자 행정처분명령서 기재 “처분이유”는 “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차량연료로 3회 판매함”으로,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, 2, 3차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‘1차 4개월, 2차 3.5개월 처분을 하였다’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, 가사 위와 같은 처분이 있었더라도, 행정처분명령서의 처분이유, 청구인이 해당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정을 볼 때,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, ‘여러 개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1개의 처분을 해 달라’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

청구인은 불법에 관한 인식이 없거나 미약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여름 비수기의 영향으로 유류 사용량 및 거래처가 줄어 생활고를 겪었던 점,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,

석유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1] 행정처분기준의 1. 일반기준 중 라.항은 위반 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청구인은 1차 적발 무렵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, 2, 3차 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